

##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의 탄핵정국 극복 및 정치·경제적 반향

### 아로요 대통령의 탄핵정국 극복 과정

2005년 6월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에 대해 여당의원들이 대선부정 의혹, 가족들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하원에 제1차 탄핵안을 제출하였다<sup>1)</sup>. 제1차 탄핵안이 제출될 당시 야권정치세력들은 민중혁명에 의한 대통령 축출을 위해 시위군중 동원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코라손 아키노 전대통령, 가톨릭 등 종교계에서도 아로요 대통령에 대한 도덕성 흠결을 지적하면서 사임을 종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권에서는 정권위기를 감지하고 친정부 세력<sup>2)</sup>의 기반이 확고한 의회 내에 아로요 대통령 관련 문제를 끌어 들이기 위하여 야당의원들보다 먼저 대통령 탄핵안을 하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여 진다<sup>3)</sup>.

2005년 7월 초 군부세력의 지원을 받고 있는 라모스 전대통령이 아로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가톨릭 주교단에서도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치 않기로 발표하자, 민중혁명에 의한 대통령 축출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야당의원들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를 제1차 탄핵안보다 보강하여 2005년 7월 25일 제2차 탄핵안을 하원에 제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제1차 탄핵안이 종결되기 전에 제2차 탄핵안의 하원 접수는 법절차 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 제2차 탄핵안은 의회 차원의 논의 대상도 될 수 없었다.

제1차 탄핵안에 대해서는 하원의 여당의원들로만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탄핵사유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해 왔으며<sup>4)</sup>, 마침내 2005년 8월 31일 동 위원회는 제1차 탄핵안에 대해 탄핵사유 불충분에 따른 채택 불가로 만장일치 결의하였다. 즉 제1차 탄핵안은 하원 본회의에 상정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으로 결론졌다. 따라서 야당의원들은 지난 7월 25일 50여 명의 동료의원들이 공동

1) 필리핀의 대통령 탄핵소추절차는 탄핵안이 하원에 제출되고 특정수 이상의 의원들에 의한 공동 발의를 통해 하원 본회의에 상정, 1/3 이상 동의를 얻었을 때 상원에 회부되어 탄핵재판이 시작됨.

2) 필리핀 하원 의석 212석 가운데 주요 정당별 의석수는 아로요 대통령의 국민의 힘당 연립(Lakas Coalition)이 79석, 국민연합당(NPC) 42석, 자유필리핀동맹당(Kampi) 35석, 자유당(Liberty Party) 34석임. 국민연합당, 자유필리핀동맹당 등이 모두 친정부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상원(의석수 24석)도 친정부 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어 아로요 대통령의 의회지지기반은 확고하다 할 수 있음. 한편 자유당도 친정부 정당이었으나 아로요 대통령 축출 민중소요시기(탄핵정국이 본격화되기 전)에 친정부연립에서 이탈하였음.

3) 의회 내의 친정부세력들이 아로요 대통령에 대해 국정책임자로서의 위치가 위험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통령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4) 하원 본회의에 탄핵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특정수 이상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야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해 온 것으로 보임.

제출하였던 제2차 탄핵안을 2005년 9월 5일 하원 본회의에 공동 발의를 통해 상정하였다. 그러나 하원 본회의에서 야당 측의 탄핵안은 상원 회부를 위해 필요한 1/3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고 158 대 51로 부결되었다.

아로요 대통령은 야당의원들이 제2차 탄핵안을 하원에 제출하던 날인 2005년 7월 25일에 대통령중심의 중앙집권제에서 내각책임의 연방제로 변경하는 정치체제 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현행 헌법의 개정방향 건의 등을 담당할 43인 협의위원회의 구성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라모스 전대통령이 아로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표명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헌법 개정을 통한 정치체제개혁 추진 가속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되며, 발표 후 실제로 헌법개정협의위원회가 설립되어 현재 활동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라모스 전대통령을 추종하는 의회 내의 친정부 세력들이 탄핵안 부결을 위해 더욱 단합한 것으로 보여 진다.

## 탄핵정국 이후에도 정국불투명 소지 다분

아로요 대통령은 탄핵안이 하원에서 부결되자 헌정질서의 원만한 유지를 치하하고, 앞으로의 국익발전에 야당 측의 동참을 역설하면서 화합의 손짓을 보냈다. 그러나 야권정치세력들은 화해를 거부하고 아로요 대통령의 축출을 위해 계속 노력할 의지를 밝혔다. 하원의 탄핵안 처리과정이 부당한 것으로 보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 사임을 촉구하는 민중운동을 계속하겠다는 측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로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다시 시도하기 위해서는 1년이 지난 후에 가능한 것으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비록 아로요 대통령은 의회의 탄핵위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일반국민들의 대통령 지지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대통령으로서의 도덕성 훼손으로부터는 구제받지 못한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라모스 전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정치세력들도 아로요 대통령을 탄핵위기에서 구출한 것은 제반여건상 국정책임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다른 책임자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한편 라모스 전대통령 및 베네시야 하원의장 등 필리핀 정치체제개혁 주도세력은 아로요 대통령의 계속 재임이 앞으로 헌법 개정 등을 통한 정치체제개혁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려하여 대통령의 재임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7년 5월의 차기 총선 이전에 헌법이 개정되어, 신헌법 하에서의 총선 실시를 통해 새로운 하원이 구성되고 아로요 대통령이 초대 수상으로 취임

하여 본인의 임기가 종료되는 2010년까지 재임하게 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아로요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등을 고려할 때 2010년 총선에서 현여권정치세력들이 승리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라모스 전대통령 등 개혁주도세력들은 정치체제개혁의 당초 목적인 필리핀의 정치체질 변화는 이루지 못하고 현재의 정치적 폐단을 계속 답습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치체제개혁 주도세력들은 아로요 대통령이 2007년까지만 재임하고 신헌법에 따른 수상 취임은 포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아로요 대통령 측은 2010년까지 권좌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강력히 표시하고 있어 향후 필리핀 정국의 귀추가 주목되어 진다.

### 탄핵정국 와중에도 경제개혁 추진 지속

만성적 재정적자의 해소가 필리핀 경제정책 추진의 최우선 과제이어서, 아로요 대통령은 탄핵정국 와중에도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재정지출의 억제, 세수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의 개선 및 정비, 국영기업의 재무건실화 등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따라서 2005년 1~10월의 재정적자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2% 감소하였고,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04년 -3.9%에서 2005년에는 -3.2%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 주요경제지표

(단위 :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sup>f</sup>
경제성장률	3.4	4.3	3.6	6.1	5.0
재정수지/GDP	-4.1	-5.4	-4.7	-3.9	-3.2
소비자물가상승률	6.1	3.1	2.9	6.0	8.2
경상수지/GDP	1.9	5.7	1.8	2.9	4.2

자료 : EIU viewswire

세수기반 확충과 관련해서는 탄핵정국으로 진입하기 전에 이미 주류 및 담배의 물품세율 인상, 징세효율 제고 등을 위한 법안들이 확정 발효되어 세수증대의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 및 면세대상 축소 조정을 위한 관련 법안은 2005년 6월 10일 상원을 통과하였으나, 탄핵

정국에 휘말려 7월 1일 대법원이 효력중지조치를 발동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10월 18일 효력중지가 해제되고 11월 1일자로 시행이 가능해졌다.

또한 전력요금 인상에 의한 국영전력회사(Napocor)의 영업 손실 감소 등 국영기업의 재무건실화를 추진하여, 공공부문의 적자규모가 2005년 상반기에 GDP의 1.5%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2005년의 연중으로도 2004년 GDP의 5% 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로요 대통령은 탄핵정국에서는 벗어났어도 여타 정치적 어려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기성정치인들이 경제현안에는 관심이 없고 정쟁만 일삼는 것으로 비난하고 있다. 이처럼 아로요 대통령의 경제 지향적 태도에 대해 경제계 지도자들은 환영하고 있으며, 아로요 대통령도 본인의 국정운영능력에 대하여 경제부문의 호전을 통해 국민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더욱이 최근 재정수지개선 등에 대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으며 폐소화의 가치도 2005년 10월 중순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왔다.

한편 2005년의 경제성장률은 재정지출의 억제, 중국 및 OECD 국가들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수출증가율 감소 등으로 2004년 6.1%에서 5.0%로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05년의 소비자물가수준도 국제유가의 상승 등으로 오름세가 다소 강하게 나타났었다. 2005년의 대외거래부문에서는 상품수지 적자의 소폭 축소, 관광수입 및 해외로부터의 송금 증가 등으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가 다소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장대우겸 수석조사역 정 동 식  
(☎3779-6664)

E-mail : kdchung@koreaexim.go.kr